

광주 시선유도봉 파손 年 1만건…주원인 ‘불법유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매년 수천~1만건 이상 파손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주 5개 자치구에서만 5만 건이 넘는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졌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15억원에 달했다.

불법유턴과 교통사고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려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시선유도봉 유지·보수 관련 작업 건수는 총 5만8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012건에서 2022년 9496건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882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4년 1만3385

5년 유지보수 5만819건…지자체 예산 15억 투입 “운전자들 ‘안전운전·공공재 보호’ 시민의식 필요”

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1만2104건을 기록했다.

시선유도봉은 차량의 주행 방향을 안내하고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이다. 차량이 충돌하거나 타이어로 밟더라도 충격과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된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곡선 구간이나 야간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차량의 안전한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불법유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시선유도봉이 파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훼손된 시선유도봉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오히려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권역 곳곳에서는 부서지거나 뒤틀린 시선유도봉이 방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구 중흥동의 한 가로수 주변에는 시선유도봉이 뒤틀린 채 놓여 있었고, 서구 화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동 한 도로에 훼손된 시선유도봉이 놓여져 있었다.

동의 한 도로 갓길에도 파손된 시선유도봉이 방치돼 있었다.

운전자 김모씨(36)는 “주행 중 훼손되거나 방치된 시선유도봉 때문에 순간적으로 진행 방향을 바꿔야 하는 아찔한 순간

이 있었다”며 “모든 도로를 매일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행정기관과 교통기관에서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는 시선유도봉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치구별 투입 예산은 동구 1억5486만원, 서구 3억2158만원, 남구 2억3957만원, 북구 3억2079만원, 광산구 4억3708만원 등 모두 14억938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나 전화 신고 등을 통해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한 뒤 위탁계약을 맺은 도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15~30일 주기로 정비하고 있다”며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파손 건수가 워낙 많고 일반 시설

물과 달리 여러 차례 누적돼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은 물론 시선유도봉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병국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훼손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추가적인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해당 구간에 운전자들이 주행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시설이나 안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중대범죄수사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윤호중 행안장관 지시 공문 접수…출범 후 ‘1호 감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사건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검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검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찰청 검찰부장 재직 당시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 후보자의 행적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



금속노조총합 광주전남지부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탄압 의혹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GGM 노조탄압 해결 촉구…단식농성 돌입

사측 “단식, 근본 해법 아냐…단체교섭 통해 문제 해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탄압 의혹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가 광주시와 민형배 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가운데 GGM은 단식농성에 유감을 표하며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시장에게 GGM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민 시장이 GGM 노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회사가 최종안으로 공장 내 노조 사무실 설치를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200명이

넘는 조합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간을 500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과 김승원 금속노조 GGM지회 사무장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일 GGM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광주시가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GM 최대주주인 광주시와 민 시장이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 약속한 대로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 시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과 대책 제시,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간 2교대 시행과 캐스퍼 및 추가 차종 투입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노조는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대응과 사회적·현장 투쟁을 확대하고 동조 단식농성, 규탄 집회, 파업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GM은 노조 간부들의 단식농성이 노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GGM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 도경영을 해왔다”며 “노조 설립 이후 노동3권을 존중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능력과 범위 내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조사와 사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어민 3.3일마다 1명 사망

“어업재해 산업평균 10배”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일반 산업의 10배에 육박하고 어선사고로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어선 안전 대책은 현장 수요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사고 건수는 2023년 2047건에서 2024년 2175건, 2025년 23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1201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사망·실종자 수는 110명으로, 3.3일에 한 명씩 죽는 셈이다. 부상은 311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46명이 어선사고로 사망했고, 1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업 재해율은 6.48로 전체 산업 평균(0.66)의 무려 9.82배에 달한다.

사고종류별 어선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도 전체 사고 1201건 중 기관 손상이 393건(32.7%)을 기록했으며, 조타장치 및 추진축계 손상을 합산하면 513건(42.7%)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다.

신장식 의원은 “어민들이 3.3일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